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

양극화 대응 추진방향

2026. 11. 11.

관 계 부 처 합 동

Ⅰ. 현황 진단

□ 다양한 사회·경제적 요인의 누적·복합작용으로 다층적 양극화 발생

○ 과거 **대기업·수출 중심**의 성장전략은 **고도성장**을 **견인**했으나, **성과가** 중소기업 등으로 **충분히 확산되지 못해 임금격차 형성 및 소득격차로 누적**

*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(%, 2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) : ('16) 62.7 ('21) 69.1 ('25) 61.1

- **부동산**(수도권 중심)·**주식** 등 **자산시장**의 **빠른 성장**으로 **자산격차 심화**

○ 누적된 **소득·자산격차**가 **고령화** 등 추세와 맞물려 **세대간 격차를 확대**하고, 은퇴 이후 '**소득·연금 공백**' 발생 등 **노후 빈곤**도 **야기**

* 60세이상/30대 순자산(배, 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) : ('20) 1.47 ('25) 2.14

** 노인 소득빈곤율(%, 중위소득 50% 이하, '25년 OECD조사) : (한국) 39.7 (OECD 평균) 14.8

○ 한편, **플랫폼 경제 등 확산**으로 **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**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**노동시장 격차 발생**

□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각종 대책에 양극화 완화 노력 반영

○ **노동자 권익**(안전, 노조법개정,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), 일자리 등 **청년대책**, **3대 민생 프로젝트**(주거·일자리·서민금융) 등 **다양한 분야**의 대책 **마련·추진**

▸ **(노동)**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('26.4월), 노동안전 종합대책('25.9월),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('25.9월), 노조법 개정('26.3월 시행),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('26.4월) 등

▸ **(청년)** 청년뉴딜('26.4월),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('26.6월), 청년정책 추진방향('26.7월), 청년일자리 회복방안('26.8월) 등

▸ **(산업·지역)** 3대 메가프로젝트('26.6월), 7대 SEED 프로젝트('26.8월),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('25.9월), 성장연계형 지역인재육성방안('26.4월)

▸ **(3대 민생 프로젝트)** 주거안정플랜 119만호 공급('26.9월), 국민일자리 프로젝트(예정), 서민금융 추가지원 강화 방안(예정) 등

※ **(예산·세제)** 청년예산 28.2 → 43.3조원, 양극화 대응예산 85.7 → 117.1조원('27년 정부안), 생산적금융 ISA 신설, 지방 세제지원 강화 등('26년 세제개편안)

□ AX 확산 등 양극화 심화·가속화시키는 구조적 문제 지속 → K자형 양극화 우려

◇ ❶상단의 과실이 하단으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, 하단의 상단으로의 이동 제약 + ❷취약부문 자립기반의 지속적 약화 우려



① **(고착화된 제도·관행)** 고용형태·기업규모에 따른 보호수준 차이, 연공급 임금체계, 우월적 원·하청 관계 등으로 **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우려**

② **(산업·지역 편중)** 고용유발* 효과가 낮은 **반도체·IT 중심** 성장과 **수도권 일극체제**의 복합으로 **비수도권·소상공인·전통시장** 등에 **온기확산 미흡**

*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(명, 24년 산업연관표) : (컴퓨터·전자) 2.87 (서비스) 9.5 (전산업) 7.8

③ **(세대) 가파른 고령화***로 인한 **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 감소, 빈곤 고령층의 생계형 일자리 유입** 확대 등 **국민의 자립기반 약화**

* 65세 이상 인구비중(%, 26년 고령자통계) : ('24) 19.6 ('25) 20.6 ('26.7) 21.6 ('36^{e}) 30 ('50^{e}) 40

④ **(재분배) 소득분배**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힘입어 **'10년대 이후 지속 개선** → 최근 **개선세 둔화**에 이어 **'24년 악화 전환**

* 지니계수 : ('19) 0.336 ('20) 0.328 ('21) 0.329 ('22) 0.324 ('23) 0.323 ('24) 0.325
5분위배율(배) : ('19) 6.17 ('20) 5.75 ('21) 5.83 ('22) 5.76 ('23) 5.72 ('24) 5.78

⑤ **(AX 확산)** AI 관련 정보·수용 비대칭성이 **제도·관행, 산업·지역 편중, 세대간 역량 등 양극화 심화·가속** 우려

⇨ 양극화 현상 등 심화시, **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우려**

* 상위 10%의 자산점유율이 1%p 상승시 2년 후 총요소생산성 0.16% 하락('26.6월, 한은)

◇ **대한민국이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그간 노력을 기반으로 "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체계적인 양극화 대응" 추진 필요**

Ⅱ. 추진방향 및 전략

◇ **국민·기업의 성장 및 변화 적응력 지원 등을 통한 "이동성 복원" + 취약부문의 "하방압력 해소" 동시 추진**

ㅇ **국가의 인적·정책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전력**

1 '관련 全 부처 + 국책연구기관 + 민간전문가' 등 **범정부 협업체계**를 **구축·운영**하고, **실무 워킹그룹 수시 가동**, 회의결과 **대외공개 추진**

2 양극화 해소의 **구조적 접근, 국민 체감도**가 큰 **5대 분야***에 **집중, "문제해결형 핵심 정책과제" 발굴에 중점**(백화점식 과제 나열 지양)

* 5대 분야 : ❶노동시장, ❷산업(기업), ❸지역, ❹세대, ❺사회 격차 완화(AX 대응은 각 분야에 포함)

3 **추진 가능**한 **핵심 정책과제**는 재정·세제·금융·규제개선 등 **정책패키지 집중 지원** → **성공 모델화 후 확산** 추진

* [예시 : 조선업 원·하청 상생협약] ('27.上) 기존협약 점검·보완, AX대응 관련 신규협약 마련 및 정부지원 보완 검토 → ('27.下~) 성과점검 및 방산·자동차 등 타업종 확대 검토

ㅇ **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핵심과제**는 **공론화** 등을 통해 논의 지속

Ⅲ. 양극화 대응 추진체계



※ 추진과제 등에 따라 총괄반·작업반 참여기관은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

□ **(구성) 경제부총리**를 **팀장**으로 **「양극화 대응 TF」** 가동(경제관계장관회의 활용, 관계부처 장관 및 경인사연 이사장 등 참여)

○ **(총괄반) 재경부·복지부 1차관**(공동팀장), **각 부처 차관**(부문별 작업반 팀장), **경인사연 사무총장** 등 참여

- **기본방향 설정**, **TF 총괄·조율** 및 **진행상황**을 **점검**하고, **3대 민생 프로젝트**(주거·일자리·서민금융) **면밀히 점검·관리**

○ **(작업반) 5대 핵심분야 주관부처 차관**(작업반 팀장), **부처 1급** 등 참여

- **작업반 팀장 중심**으로 **국책연구기관** 등과 **협업**해 **핵심과제 발굴·구체화**

* 분야별 과제를 추진시기(단기('27), 중장기('~30)), 추진내용(이동성 복원, 하방압력 해소) 등으로 구분제시

※ 양극화 대응 실무지원을 위해 재경부내 「양극화완화대응반」 구성 및 「민생안정지원단」을 가칭「양극화완화지원단」으로 확대 개편

□ **(운영) 매주 작업반별** 회의 및 **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** 개최

○ 각 작업반·총괄반 회의결과 등에 대해 **보도자료 배포** 등 추진

※ 부처간 중점 협의 필요 과제 등은 경제현안간담회 통해 별도 논의·조율

Ⅳ. 향후 계획

1 **(11.11일) 경제관계장관회의**를 통해 **범부처-국책연구기관 협업**을 통한 **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발표 → 총괄반 즉시 가동**(11.12일)

2 **(11~12월초) 부문별 작업반·총괄반 논의**를 거친 **5대 부문별 추진방향**을 **양극화 대응 TF**에 **보고·논의**

3 **(연내) 부처간 합의된 과제 추진방안** 및 **내년도 추진방향** 등을 정리해 **「2027년 경제성장전략」**에 발표

※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, 추진계획·일정 등 제시 검토

4 **('27년~) 양극화 대응 TF, 각 작업반 등을 지속 운영**하여 과제 **추가 발굴,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사항 등 점검**